

신정부 중심 바로 잡아야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는 계층간 집단간 갈등 심화라는 자화상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 주문했던 '사회갈등 봉합'이라는 국민적 여망이 초기부터 도전을 받는 상황이다.

인수위에 대한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가운데 나타나는 이해집단간의 치고박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한 차원을 넘어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어느 부처 거의 예외없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와 정부, 이해집단간 불협화음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념과 정책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또 국가를 이끌고 갈 고위 정책담당자들도 상당수 교체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상황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닌데도 지도자 한 사람 달라지게 됐다고 온통 나라가 뒤끓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마치 환자의 상태는 동일한데도 담당의사와 간호사가 바뀌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다.

각계 각층의 견해 대립

경제현안의 경우 인수위와 정부 뿐 아니라 재계, 노조, 시민단체 등까지 포함돼 갈등과 대립이 복잡·미묘하게 빚어지고 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공기업민영화,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과 신도시건설 등 상당수 사안에서 노 당선자 선거공약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인수위측과 DJ 노선에 따라 정책을 추진

해은 정부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와 노조 시민단체 등이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를 대며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금은 “물흐르듯 개혁하겠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노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도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권과 일부 집단이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한나라당 고위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몰아붙였던 것은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또, 일부 여론지도자들이 노 후보에 반대했던 과반수 유권자를 운운하면서 새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일변도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지금 노 대통령 당선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엽적이고 소소한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무경험이 별로 없고 이상에 치우쳐 있는 학자 중심의 인수위가 시시콜콜한 문제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 공무원이나 재계 인사의 말 한마디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수위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이다. ‘한국호(號)’라는 거함의 새로운 선장을 맡게 된 노 당선자는 보다 넓고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배를 향해시켜야 한다. 보다 굽은 선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배가 요동치지 않고 제대로 향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중장기 비전 제시를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국민적 콘센서스를 바탕으로 지도자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은 이를 따르기 위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코리아노믹스’를 내걸고 합심단결해야 할 시점이다. 코리아노믹스는 ‘코리아’와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개념이며 부국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철학이다. 일본은 일찍이 저패노믹스라는 기치를 내걸고 ‘구미제국을 따라잡자’는 국민적 운동을 펼침으로써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바 있다.

코리아노믹스의 첫째 실천강령은 기업의 ‘경제적 자유도’를 높여주는 일이다. 산업간 접목(fusion)과 수렴화(convergence),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규제 위

주의 20세기형 기업 및 산업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중점을 뒀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이 채 안되는 국가가 벌써부터 3만불, 4만불 국가를 흉내 내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마치 뱀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으로 부국이 되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사·정이 대립관계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가장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는 올 봄부터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춘투(春鬪)’다. 두산중공업 노조원의 분신자살 사건 이후 노사간에는 심상치 않은 대결 구도가 형성돼 가고 있는 모습이다. 노사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한국경제는 더욱 불안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이 집단 저 집단 눈치를 다 살피다가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결단성 있는 통치 행동이 필요하다.

개혁의 칼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보다는 정치권과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대야 하지 않을까. 신정부 출범에 앞서 노당선자를 비롯한 관련 국가 지도자들은 올바른 국정 방향과 정책비전을 설정하고 국민 앞에 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